성장에 날개를
지역에 미래를
민생에 활력을
규제합리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0.(화) 10:30 배포 2026.11.10.(화) 09:00

성장·지역·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 국무조정실,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개최 -

- 장기간 미해결 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 지역의 미래를 여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등 지역주도성장 기반 조성
- 국민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 개선 추진
- 규제합리화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정례 브리핑' 본격 도입

□ 국무조정실은 11월 10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였다.

○ 국민주권정부는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개선**에서 **수요자 입장**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짜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이러한 원칙 아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브리핑에서는 **'성장', '지역', '민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1.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한 규제합리화

1 AI

○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사례 등을 구체화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26.2.26)하고 **AI 전담 상담을 지원**하여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고,

○ AI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신유형**('0유형', 'AI유형')을 **신설**('26.1.28)하여 공공저작물·데이터 학습활용 여부에 대한 **AI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2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6.6.18)하여 **영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26.1.21)하여 **자유롭고 폭넓은 실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3 로봇

○ **기계식주차장치(오토발렛)** 및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26.7.29)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입주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으며,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존 16가지 **인증 항목을 8개로 축소**('25.11.24)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되었다.

4 바이오·의료

○ **첨단재생치료 심의 단계 개선**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26.4.23)하여 **해외 원정 치료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평균 400여일에서 **세계 최단 기간인 최대 240일로 단축**('26.6.1)하여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였다.

5 순환경제

○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 시 **보증부담을 면제**('26.4.7)하여 **핵심 폐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망을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26.9.15 법개정, '27.3.16 시행)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6 문화·콘텐츠

○ 저작권 침해물,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26.2.19)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 또한, **모태펀드**가 **영화 산업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수익 지분을 60%에서 20%로 완화**('26.4.30, 3년 한시)하여 **대·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합리화

1 국민불편 해소

○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유선상담**을 받아야 했으나,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 및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신청 허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간편화('26.6.26) 하였다.

○ 또한, **공연·스포츠 분야**의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26.8.28)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였고,

○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의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서비스를 개시('26.6.15)하여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 휴원·휴교, 방학,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26.8.20)하여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 기업 활동 애로 해소

○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26.10.15)으로 **지자체별 상이한 인·허가 기준을 해소**하여,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

○ 또한,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완화**('25.9.19)하여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26.10.6)하여 반도체공장의 **설계·시공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회적 약자 보호

○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26.10.28, 입법예고)하여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고,

○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26.1.16)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25.10.15)하여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사업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25.10.10)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통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하였다.

3.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

○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되었다.

-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특례**와 Upgrade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와 함께 11월에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현재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나,

-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 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 이는 **생명·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후 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의 **전략적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도 마련하였다.

□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정호 (044-200-2430)
		담당자	서기관	장동엽 (044-200-236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1.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한 규제합리화

1 AI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문체부>** 기존 AI 학습데이터로 광범위한 양질의 저작물 이용이 필요하나, 現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이 법원 판결 전까지는 불확실하여 AI 학습에 제약 개선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사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제시·AI 전담 상담 센터 지원 기대효과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 마련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발간 및 AI 전담 상담 창구 개설 ('26.2.26.)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문체부>** 기존 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 다수 존재 및 공공누리 유형 이용조건*으로 인한 AI 학습 활용 제한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등 개선 공공저작물에 부착 시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AI 유형' 등 신설 기대효과 AI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확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고 개정 ('26.1.28.)
	<과기정통부> 기존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저작물의 일부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제한이 있어 AI학습 활용에 제한 개선 AI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신유형 ('0유형', 'AI유형') 신설 및 부처별 신유형 전환·부착 점검 및 추진 기대효과 공공저작물·데이터 학습활용 여부 관련 AI생태계의 불확실성 해소	공공누리 신유형('제0유형','AI유형') 신설('26.1.28.),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발표 ('26.8.27.)
행정부 외 공공데이터 개방	**<과기정통부>** 기존 판결문 등 행정부 外 공공데이터 개방 미흡 개선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 판결문 데이터 일괄 제공 기대효과 고도의 논리성을 가진 데이터를 정예팀에 제공하여 독자AI프로젝트 모델의 추론능력 등 고도화	판결문 데이터 정예팀 제공 ('26.8.19.)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행안부> 기존 ①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무원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 ② 행정부 外 공공데이터 개방 미흡 개선 ① 현행 법률의 면책 규정 구체화 및 면책 안내서 마련 ②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기대효과 대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①「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발간, 배포('26.2.5), ②「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26.1.6)

2 자율주행차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국토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가명처리하면서 영상 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한계 발생 개선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자율주행 인식모델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정밀도(Average Precision)가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시 최대 17.6% 개선 (가명정보 31.2 → 원본정보 36.7)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26.3.17) 및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고시) 제정, 시행 ('26.6.18)
자율주행 실증지역 도시단위 확대	**<국토부>** 기존 자율주행 여객운송 등 시험운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중이나 범위가 협소 개선 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 대폭 확대(노선→도시) 기대효과 자유롭고 폭넓은 실증 데이터 확보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 발표('26.1.21) 및 지정('26.4.28, 광주)

3 로봇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주차로봇 안전기준 정비	**<국토부>** 기존 입주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오토발렛 주차장치 및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제한 개선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토발렛 주차장치 및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기대효과 공동주택 내 오토발렛 주차장치 및 자동이송 주차장치 설치 허용으로 도심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입주민 편의 증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6.7.29)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간소화	**<산업부>** 기존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통행을 위해서는 운행안전인증* 취득이 필요하나, ❶심사에 장시간 소요(2개월)되며, ❷심사항목이 많아 기업 애로 *「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선 ❶심사기간을 최대 60→30일로 축소, ❷기존 16가지 인증 기준 內 유사항목은 병합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해 인증항목을 8개로 축소 기대효과 신속한 실외이동로봇 심사 지원 및 행정 부담 완화로 상용화 가속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5.11.24)

4 바이오·의료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활성화	**<복지부>** 기존 ❶난치질환의 정의 불명확, ❷치료제도 도입 후 치료 승인 사례 부재, ❸최신 기술 미반영 개선 ❶가이드라인 개정, ❷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❸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첨생법 제2조제2호) 기대효과 1호 승인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활성화 및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26.4.23)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	**<식약처>** 기존 의료제품 허가·심사 평균 398~420일 소요 개선 허가기간 최대 240일로 단축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에 대한 전담심사팀 운영, 동시·병렬심사, 수시검토·보완체계 등 기대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심사로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민·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시행 ('26.6.1)

5 순환경제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폐자원 수입관세 완화	**<기후부>** 기존 핵심광물 수요 증가로 폐기물이 '전략자원'이 됐으나, 까다로운 수입 규제로 원료 수급 애로 발생 개선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시 보증부담 면제 기대효과 방치·투기 우려가 낮은 자원의 수입보증 부담을 완화하여, 핵심폐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망 구축 및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 ('26.4.7)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폐자원 수입절차 간소화	**<기후부>** 기존 핵심광물 수요 증가로 폐기물이 '전략자원'이 됐으나, 까다로운 수입 규제로 원료 수급 애로 발생 개선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3년까지 확대 기대효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26.9.15) *'27.3.16 시행

6 문화·콘텐츠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미통위>** 기존 기존 대면심의 방식 위주로 저작권 침해 정보 등에 대한 신속 삭제·차단에 상당기간 소요 * '24년 기준 : 저작권 침해 11일, 마약 57일, 도박 149일 개선 저작권 침해물,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 기대효과 국민 생명·재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주요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여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6.2.19)
모태펀드의 대기업 제작 문화·콘텐츠 투자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모태펀드는 대기업 투자가 불가하나,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할 경우 예외 허용 (중소기업 지분 60% 이상) 개선 영화산업 등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수익 지분 20%로 완화(3년, 한시) 기대효과 영화 프로젝트 투자범위 확대를 통한 대·중소기업 공동제작 활성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시행 ('26.4.30)

2.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합리화

1 국민불편 해소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 개선	**<방미통위>** 기존 이동통신, 인터넷 등 가입은 용이하지만, 해지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유선상담까지 받아야 하는 등 불편 개선 해지시 필수적으로 유선상담을 거치는 절차 폐지,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신청 허용 등 기대효과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간편화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발표 ('26.6.26)
공연, 스포츠 암표 근절	**<문체부>** 기존 공연, 스포츠 분야 불법 암표 문제 심화 개선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법 암표거래 근절 기대효과 불법 암표 거래 근절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26.8.28)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기후부>** 기존 식품매장(음식점, 베이커리 등)에서 판매 후 남은 제품,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을 폐기 처분 → 음식물 쓰레기 발생, 매장수익성 감소 개선 플랫폼 기반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본격 개시·운영('26.6~)하여 식품 재고정보를 공유,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식품사업자는 폐기량 감소 (기후부-플랫폼-식품사업자 협업체계 구축) 기대효과 배달·마감 플랫폼 등을 통해 매장과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수익 창출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 개시 ('26.6.15)
단기육아 휴직제도 도입	**<노동부>**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분할 사용 횟수 제한(최대 3회), 급여 지급 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을 것' 요건으로 인해 긴급한 단기 돌봄 공백 상황에서의 활용 제약 개선 휴원·휴교,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연1회, 1주 또는 2주 단위) 기대효과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 발생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6.8.20)

2 기업 활동 애로 해소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ESS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기준 명확화	**<기후부·국토부>** 기존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건축법」을 상이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로 분류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사업자의 행정부담 증가 개선 지자체(허가권자)가 ESS 컨테이너에 대해 법적 분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후부·국토부) 협의를 거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기대효과 지자체별 상이한 인·허가 기준 해소, 사업자 인·허가 기간 및 비용 절감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26.10.15)
반도체 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국토부>** 기존 11층 이하 매층마다, 수평거리 40m마다 설치 의무 개선 (수직) 층고가 높은 건물의 경우 사다리차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층수와 높이 모두 고려토록 개선 (수평) 클린룸 등에 창을 낼 수 없어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개선 기대효과 반도체공장 클린룸 특성을 고려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합리화로 설계 자율성 확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시행 ('25.9.19)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국토부>** 기존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층간 방화구획 의무 개선 반도체 공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완화 기대효과 반도체공장 특성에 맞는 방화구획 기준 적용으로 설계·시공 부담 완화하면서도 화재안전 확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 ('26.10.6)

3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65세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화	**<국토부>** 기존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현장 발급을 주로 이용하면서 수수료 지급→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로 작용 개선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일부 민원서류(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시에도 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부담 완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6.10.28)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몸이 불편한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성평등가족부>** 기존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6학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육부진에 의한 취학유예, 질병휴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만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은 아이돌봄 서비스 불가 개선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 초과 초등학생 모두 아이돌봄 지원 가능토록 개선 기대효과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양육부담 완화 및 돌봄 공백 해소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배포 ('26.1.16)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과제명	과제 내용	시행 내용
상표권 우선심사 대상 확대	**<지재처>** 기존 일반 상표등록심사(1년 이상 소요)와 달리 신속한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 우선심사(2개월 소요) 제도 예외적으로 운영 중 개선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심사기간 1년 이상→2개월) 기대효과 심사기간 대폭 단축으로 창업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5.10.1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	**<문체부>** 기존 준공 이후 3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 불가 개선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하되,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기대효과 실질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등록여부를 심사하여 규제 효과성 제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통한 숙박 확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개정, 시행 ('25.10.10)

3.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

<table>
<tr><th>과제명</th><th>과제 내용</th><th>시행 내용</th></tr>
<tr><td>초광역특구법
제정</td><td>기존 소규모 지역에 분절적 지원

개선 ▲지역 광역화 + ▲광범위한 규제특례 + ▲재정·금융·세제·인재 등 정책 종합 패키지 지원

○ 규제특례(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특례, Upgrade규제샌드박스)

< 초광역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예시 >
<table><tr><th>모든 초광역특구에 적용가능한 공통특례</th></tr><tr><td>• 인프라 : 인허가 의제,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td></tr><tr><td>• 생산시설 :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td></tr><tr><td>• 인재유치 : 교수·연구원 휴직·겸임, 외국인 비자 등</td></tr><tr><td>• 정주여건 : 기업 종사자 위한 주택 특별분양 등</td></tr></table>
<table><tr><th>산업별 맞춤형 특례</th></tr><tr><td>• 반도체 :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td></tr><tr><td>• 로봇 :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부여</td></tr><tr><td>• 자율차 :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td></tr><tr><td>• 에너지 :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td></tr></table>
○ 정책지원 패키지(투자 인센티브, 기업 활동기반, 산업생태계) 제공
* (예) ▲재정(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 ▲인재(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인프라(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 ▲세제(조세 및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기대효과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td><td>'초광역특구법' 발의
('26.10.20/10.21)</td></tr>
</table>